

##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손 승 영\*

### 국문요약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후 해외 입양 시행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도화된 합법적 결혼만이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미혼모는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오명을 안고 모성을 포기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입양이 아동 양육을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즉, 한국에서 미혼모 자녀를 해외로 밀어내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배타적 가족주의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양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으로의 유입이 해외 입양 결정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 입양 보내기 사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입양 전문기관은 수수료가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국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해외 입양 보내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배후 역할을 해왔다.

**주제어:** 미혼모, 해외 입양, 배타적 가족주의, 성인 입양인, 국가의 책임

† 이 논문은 2017년도 12월에 동덕여자대학교 공모형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sysohn@dongduk.ac.kr

<http://doi.org/10.17789/discou.2020.23.1.005>

## I.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1950년대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65년이라는 반세기 이상의 긴 시간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바뀌었고 법과 제도도 변화하였지만,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던 1980년대에 해외 입양 보낸 아동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21세기 경제대국에 포함되고 있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해외 입양을 다룬 대부분의 논의들은 복지, 법, 제도, 인권 등과 같이 분절되거나 부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는 많으나, 자녀 입양보내기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로 입양을 보냈던 성인 입양인들의 삶을 동시에 감안하여 교차성을 고려한 연구는 지금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입양을 교차성의 렌즈로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작동하는 분석 범주가 단일하지 않고 젠더규범, 계급, 연령, 사회적 이념 등 다양한 범주들이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주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해외 입양에 대해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미혼모나 성인 입양아들을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혼모 인터뷰에 기초한 연구들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판단 하에 보다 넓은 틀 속에서 해외 입양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시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원가족이 보호해야 하며 입양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취지에 걸맞게 한국 해외 입양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해외 입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던 한국의 입양정책과 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미혼모들이나 혼혈 아동을 둔 엄

마가 자녀를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국의 가족주의이데올로기와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입양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직접 대상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바람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나 미혼모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된 입양인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미혼모와 입양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할 것이다.

## II. 역사적 맥락에서의 입양과 입양정책

입양은 출산에 의한 자연적 혈연관계가 아닌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 제도이다. 입양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지만, 20세기에 진입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되었다(최형묵, 2008).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선주민의 아이들과 여성들의 혼외 자녀를 백인 중산층가족으로 대거 입양 보내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6백만에서 1천만 명 정도의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냈으며, 캐나다에서는 약 35만 명의 미혼모가 자녀를 떠나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권희정, 2019:18). 이른바 ‘아기 퍼가기 시대(Baby Scoop Era; 아이스크림을 떠내듯 친생가족으로부터 아기를 분리시켜 다른 곳으로 배치시킨 베이비 스쿱 시대)’라 불리는 시대적 사건으로서의 대규모 입양프로젝트가 실시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 수천 명이 호주로 보내졌는데, 해외 입양 보내기는 1973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를 소재로 ‘추방된 아이들’(2010)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1920년부터 수십년간 공

핍한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혼모의 자녀를 세계 각국으로 강제 입양시켰고, 아일랜드 수녀원을 배경으로 젊은 미혼모의 실화를 영화화한 ‘필로미나의 기적’(2014)이 제작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6.25전쟁으로 생겨난 전쟁고아<sup>1)</sup>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는데, 전후 입양시행 초기 입양 아들 중에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sup>2)</sup>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의 대 잇기가 절대 기준으로 정립되어 친족 간 입양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전쟁고아나 혼혈아들은 개별 가정의 입양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의 형태를 주로 취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을 당시의 피폐한 경제로는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정부는 1954년 보건사회부 내에 <한국아동양호회>를 설치하고, 「고아양자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해외 입양을 적극 지원하였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고 외국인의 한국인 고아입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 입양이 보다 용이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후에도 법적 지원은 계속 이어졌고, 1980년대 초에는 해외 입양관련법이 완전 개방정책으로 재정비되어 해외 입양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던 1985년에 8,837명이라는 많은 수의 우리나라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기도 하였다. 입양아동이 전쟁고아에서 미혼모 자녀들로 대체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해외 입양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부무 공식통계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04년까지 약 36만 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해외 입양에서 한국아동이 차

1)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추상미 감독, 2018년 10월)’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전쟁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전쟁고아 1,500명을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냈다가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본국으로 송환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 ‘혼혈아’라는 표현 자체가 단일민족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종차별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차별적인 시선과 사회분위기를 못 견딘 혼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외 입양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혼혈아라는 용어가 지니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지한 비중은 전체 입양아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가히 세계 최대 규모였다(이삼돌, 2008; 이미정, 2009:73에서 재인용). 2015년 한국은 중국,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우간다와 함께 아동의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5개국에 꼽힐 정도로 한국아동 해외 입양 보내기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미디어오늘, 2019/5/10.).

1970년대 북한이 우리의 입양보내기 관행에 대해 ‘새로운 수출품’이라고 비난하자 북유럽 국가로의 해외 입양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 입양 중단을 목표로 감축 계획을 세웠고, 1976년에는 국내 입양 촉진을 목표로 기존의 「고아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해외 입양은 완전 개방정책으로 바뀌고 입양기관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입양아 숫자가 늘었고 많은 아동들이 해외에 입양되었다(권희정, 2015: 66-67).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아기 장사를 하는 나라,’ ‘고아수출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입양아들은 ‘수출용 아기들(babies for export)’ 또는 ‘판매용 아기들(babies for sale)’로 칭해지기도 했다. 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정부는 해외 입양 감소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입양아 수의 쿼터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서 해외 입양이 잠시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지속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의 숫자가 증가해 온 점은 모순적 현상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의 숫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였는데, 아이들의 어머니는 다수가 미혼모였다. 해외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 비율은 1958-60년에는 9.0%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는 36.5%로 증가했고 2001년부터는 99%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06; 이미정, 2009:72에서 재인용). 이러한 변화 추이를 요약하자면, 1960년대 후반까지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주요 입양대상이었으나, 1970년대에 미혼모 자녀로 대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해외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권희정, 2015:52). 1980년까지는 미혼모 자녀가 국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였고 해외 입양의 58%였으나,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미혼모 자녀가 국내 입양의 79%와 해외 입양의 94%에 이르렀다(권희정, 2014:75). 이러한 통계들은 자녀를 키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미혼모들은 자신이나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히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입양을 선택해왔음을 시사한다.

### III. 배타적 가족주의와 박탈된 미혼모의 모성

#### 1. 부계혈통주의와 ‘대 잇기 입양’

불교국가인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부모 잃은 아이에 대해 이웃이나 친지가 온정을 베풀겠다는 개별 가정의 결정이 입양의 주요 동기였다. 당시에는 성이 다른 이성양자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입양된 양자는 새 부모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들어 유교적 전통이 확고히 뿌리내림에 따라,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제도가 변화하였다. 부계혈통 유지를 위한 ‘대 잇기 입양’은 아동복지차원이나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지역사회 평화나 공동체 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김주수, 1991; 안재진, 2011:77에서 재인용). 가족의 개념은 고려시대의 양계제와는 달리 부계혈통주의로 대체되었고, 가족문화도 전형적 부계 확대가족의 규범을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온정적 입양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계가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 잇기 입양’이 입양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로 인해 성씨가 같은 부계 친족 집단에서 양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변모되어서, 부모를 모르는 집 아이들은 도외시되었다. 한국가정에서는 비혈연 입양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었고 ‘근본도 모르는 집안의 아이’라는 이유로 입양

을 꺼리는 정서적 태도가 확산되었다. 또한 ‘대 잇기 입양’의 대상은 모두 남자 아이였다. 이러한 배타적 가족문화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아들 없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부계 혈통 친척 중 양자를 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친족 남아를 입양하기도 했으나, 여아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가계 승계가 입양의 절대 기준으로 정착되고 지속됨에 따라, 한국전쟁에서 생겨난 많은 고아들을 개별 가정에서 입양해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지 못했다(윤택림, 2005:71). 게다가 불안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고아들은 해외 입양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대 잇기 입양’에 길들여진 우리의 배타적 가족주의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혼혈 아동에 대해서는 기지촌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사생아 취급을 하였다. 혼혈아는 1955년에 439명에 불과했으나 1965년에는 1,378명으로 증가하였다(김아람, 2009:40). 미 군정기에는 미군과 남한 여성 사이에 일시적 관계에 의해 혼혈아가 태어난 경우가 많았지만, 전쟁 후에는 미군부대가 정착하고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나 동거에 의해 혼혈아 출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양공주의 자녀’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과 생활고를 이유로 혼혈아들이 유기되었다. 혼혈아의 경우 엄연히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윤리문제를 내세워서, 향후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집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고아처럼 규정되어 이들의 해외 입양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혼혈아를 둔 어머니에게 모성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었고 미군 아버지의 나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여 탈모성화가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권희정, 2014:57).

한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과거 친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 유지가 힘들어지고 친족 간 왕래도 줄어들어 따라 친밀성이나 경제 교류 또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친족관계의 축소는 친족 양자제도를 통해 아들을 공유하던 ‘대 잇기 입양’ 관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입양위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의 아동 양육 장소로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혈연공동체적 이해가 제외되었다. 비혈연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근대적 형식의 입양제도가 국내에서 실시됨에 따라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입적하여 키우는 방식으로 시각이 변화하고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입양에서 대 잇기 목적이 약화되면서 아들보다는 딸을 입양하는 가정이 증가하였고 입양의 주된 이유로 “딸 키우는 재미 때문”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입양대상이 변화해 왔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자 남아선호 사상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입양에 있어서 부계혈통중심의 ‘대 잇기’ 명목은 사라지고 있다.

## 2.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탈모성화

한국사회의 전형적 가족주의이데올로기에 부합되지 않는 미혼모는 사회적 비난과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근대 핵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미혼모 가족은 비정상과 결핍의 상태로 규정되었다. 윌리엄 구드의 지적처럼 ‘아버지 없는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은 ‘미완성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적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구드, 1982:27). 제도화된 합법적 결혼만이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미혼 여성의 성경험과 자녀 출산은 떼뗄하지 못해서 평생 숨겨야 하는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정상가족 이념에서 배제된 미혼모는 비정상 가족으로 치부되고 차별받는 상황에서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오명을 안고 모성을 포기해야 했다(서정애, 2009:2).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당연시 하였던 국가정책 또한 미혼모 가족에 대해서는 성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편견적이어서 입양을 통한 집단적 재배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조이스, 2014). 미혼모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적절



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은 여성의 결정권이나 선택을 박탈한 채, 미혼모를 타자화하고 탈모성화의 길을 걷게 한 전형적인 논리이다. 어머니 자격이 없는 비정상적인 여성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모성 박탈’ 논리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정상가족 규범이 약화되면서 여성 스스로 사회적 편견과 맞서기 시작하였다. 부적절한 모성으로 간주하여 강제로 한 미혼모 자녀의 입양 관행은 미혼모의 요구를 반영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들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미혼모의 양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1980년대 해외 입양이 정점에 이른 후에도 지속되어 지금까지 해외 입양의 대부분을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인식에는 우리의 배타적 가족주의와 정상가족이 테올로기가 내재해 있다(손승영, 2006). 일반인들의 태도나 가치관이 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지만,<sup>3)</sup>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4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손승영, 2018:84). 더욱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동거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문항에 2018년 69.7%가 반대하여,<sup>4)</sup>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해 국제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40개국이 포함된 2012년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 분석에 따르면 유럽

3) 2008년에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였으나, 2018년에는 56.4%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비율이 과반에 이르렀다.

4)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있어서 20대와 30대는 36% 이상이 찬성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22%만 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감안하면,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가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들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어서 덴마크 응답자의 91.8%에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에서는 모두 8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ISSP, 2012).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2012년에 한국인의 25.2%만이 찬성함으로써, 터키(13.5%), 중국(18.0%), 인도(20.7%)에 이어서 4번째로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결혼을 당위로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 출산과 미혼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손승영, 2018:86-87). 비전형적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규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하고 법적 보장이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법률혼 외의 다른 형태를 선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한국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과중하게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비혼 출산은 특히 여성에게 힘든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손승영, 2007).

#### IV. 한국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한국에서 아동의 해외 입양은 국가가 한 축을 담당하고 민간영역에서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해외 입양 초기 형태는 해리 홀트 부부가 8명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사례가 미국에 소개되면서 자선 단체나 선교단체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1956년 해리 홀트가 〈홀트양자회〉를 설립하여 고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해외 입양의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외 입양을 위한 정부기구로 설치된 〈한국아동양호회〉는 반민반관의 단체로 활동하다 현재의 〈대한사회복지회〉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방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 등과 같은 복지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입양이 제도화되고 해외 입양이 촉진되었다. 이들 보건복

지부에서 인가한 5개 기관들 중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고 국내 입양으로 한정된 곳은 〈성가정입양원〉뿐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성가정입양원〉은 1989년 ‘우리아이 우리손’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입양 전문기관으로 발족되었다. 한국에서 미혼모 상담 사업은 1960년대 후반부에 국내 입양기관인 〈한국기독교양자회〉 설립 후 시작되었다. 해외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세 기관 모두 1972년부터 미혼모 대상 상담 및 보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 보내기 사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한국의 입양 전문기관은 수수료가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국가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해외 입양 보내기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배후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백만장자 해리 홀트는 한강에 버려진 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생활이 담긴 영상물을 보고 한국에 건너와서 혼혈아 8명을 입양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해리 홀트의 아내 버사 홀트는 미국에 머물면서 미 국회에 편지를 쓰는 등 활동하여 1955년초 국회에서 ‘홀트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전쟁고아의 미국으로의 입양이 가능해졌다. 해리 홀트는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1년 만에 236명의 혼혈아가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1964년까지 총 2,809명의 혼혈아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권희정, 2019:101-103).

한편, 미국인 선교사 해리 홀트가 세운 ‘홀트양자회’는 입양 전문기관으로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에 매진함으로써 높은 수수료를 챙겨 왔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해외 입양을 산업화한 해리 홀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 두 가지를 고안해냈다. 대리 입양을 통해 미국인 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하게끔 간편하게 만들었고, 아기 수송용 전세기를 띄워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수월하게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하였다(오, 2019:25).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아동들을 해외 입양 보내면서 산업화를 추동한 것은 결국

한국 정부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아인’ ‘GI 베이비’를 미국에 많이 보내는 게 최고의 복지사업이라고 천명하기도 했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가 있던 아이들마저 고아 호적을 발행하여 신분 세탁을 허용하기도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부자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모들도 해외 입양을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여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성매매 종사 여성이나 미혼모들의 친권 포기는 어머니의 자녀 사랑 형태로 수용되기도 했다(권희정, 2019:77-80). 결국 한국 정부는 요보호 아동들을 해외 입양 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서울 올림픽 기간 동안 해외 언론들이 한국정부가 요보호 아동 문제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을 게을리 했다고 비판한 내용들이 이와 맥을 같이한다. 전쟁으로 고아 숫자가 급속히 늘게 되자 재정난을 겪던 고아원들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국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는 당시에 늘어났던 혼혈아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보낸다는 명분으로 해외 입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으며, 이는 한국의 부계 혈통주의 담론과도 부합되는 논리였다.

아리사 오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 붐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의 고아 복지를 위한 비용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서 태어난 혼혈아인 GI 베이비들을 아버지 나라로 보내길 원했고, 미국인들은 GI 베이비들을 입양하길 원했다. GI 베이비들의 미국 입양은 해리 홀트의 선교활동으로 수용되어 미 의회는 영구적으로 해외 입양이 가능하도록 1961년에 미국의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오, 2019:25). 미국은 한국전 후 발생한 고아들을 대거 미국으로 입양함으로써 관용의 나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여 미국인들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었고 ‘선한 부모’가 많은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고아당사자로서 한국의 입양문화를 연

구하는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2008)은 아시아 아이들은 순종적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이 한국 아동들을 대거 입양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해왔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한국 아동들의 미국으로의 해외 입양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정부 차원에서의 이익을 안긴다고 판단되었고 산업화된 민간기관의 유지와 이익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과 정책에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이나 자녀를 떠나보낸 미혼모의 상실감에는 관심이 없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V. 누락된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포기해야했던 미혼모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강요된 입양실천과 그로 인해 배제된 모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시작하고(Musser, 1992; Riben, 1988; Robinson, 2000; Shawyer, 1979; 권희정, 2015:58에서 재인용) 어머니의 권리를 당사자의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기 퍼가기시대 연구회’를 설립하여 모성권을 박탈당한 여성들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편견 줄이기에 기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조이스, 2014:152).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 1. 자녀를 떠나보낸 미혼모의 상실감과 자조모임의 설립

서구사회에서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혼외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치료와 교

정이 필요한 비정상인으로 간주되었고 자녀를 입양 보내도록 강요당했다. 뉴질랜드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아들을 입양 보냈던 조스 셔어는 1979년에 자신의 경험을 『입양으로 인한 죽음』이란 저서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 책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미혼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를 포기했던 엄마의 죄책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평생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공감을 이끌어냈다(Shawyer, 1979). 이 책은 입양문제를 미혼모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입양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에블린 로빈슨 또한 자신의 입양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시절 테이트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입양 결정 과정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입양과 상실: 은폐된 슬픔』이란 제목의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Robinson, 2000). 당시에는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인식이 강했고, 기독교 신자였던 에블린 자신 또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에블린의 정조 개념에 대해 의심하며, 모두 하나같이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이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1970년대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서 아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에블린이 그 이후 결혼하고 낳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 털어놓았던 1990년대에 아이들은 화가 나서 대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입양 보낼 수 있느냐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시대가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입증하듯이, 1970년대 미국에서는 국내 입양 아동의 80%가 미혼모의 자녀일 정도로 미혼 여성의 친권 포기 비율이 높았으나, 1995년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양육 포기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5; 권희정,

2014:45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 미혼모들의 권리 인식과 편견에 맞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국에 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10대들이 주된 미혼모였던 초기 시절과는 달리 20대 후반이나 30·40대 여성들의 미혼 임신이 증가하면서, 무조건 자녀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예전의 미혼모들과는 차별화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해진, 2014; 성정현·김희주, 2016:39). 그 결과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 숫자는 1984년의 5.8%에서 2010년에는 66.4%로 급속히 증가하였다(이미정, 2013:43). 이처럼 자녀양육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성정현·김희주, 2016:34), 여전히 만연해 있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미혼모를 차별하고 타자화하고 있다. 실제 양육 미혼모들 중에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엄마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위탁모로 남의 애를 돌본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 몰래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기도 했으며, 40대에 미혼모가 되니 여동생들조차 한심해하면서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다(손승영, 2017:44-47).

또한 한국에서 미혼모 자조모임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입양아인 딸이 미국에 오게 된 과정을 밝혀낼 목적으로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던 의사 리처드 보아스의 권유와 재정지원에 의해 가능했다. 그는 시설 내 거주하던 20대 만삭 여성 12명이 모두 아기를 입양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리처드 보아스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단체설립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2007년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결성 후 미국에 등록하고 2008년에는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는 또한 미혼모 당사자 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다른 조직들도 생겨나 서울의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구 구미지역의 ‘대구 미혼모가족협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당사자 조직의 설립을 계기로 미혼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 앞에 미혼모의 실상을 알렸다. 이들은 자식들이 미혼모 자녀로 냉대 받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스스로 책의 한 ‘챕터(chapter)’가 되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있다.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자신이나 자녀를 향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적극 맞서면서 미혼 임신부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미혼모들이 점차 독립적 태도를 형성하고 싱글맘으로서의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미혼모를 요보호대상으로 취급하는 편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일깨워준 계기는 성인이 되어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미혼모들을 응원하면서이다. 원가족모임인 민들레회와 미혼모가족협회 및 입양인들은 정부가 입양의 날로 정한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이라 선포하고 2011년부터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졌다. 결국 이들의 당사자 운동 성과로 정부는 2018년 5월 1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날’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프레시안, 2019. 5. 8). 첫해를 맞는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5월에는 미혼모 당사자 조직들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위기 임신, 출산지원의 제도적 보장,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 베이비박스 증설 금지, 해외 입양 중단 등을 주장하여 가족가치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였다.

## 2. 성인 입양인을 통해 본 아동입양의 엇갈리는 평가

해외 입양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논리가 우선했고, 잘 사는 나라의 따뜻한 양 부모 가정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다. 해외 입양을 통한 성공신화가 강조되면서 깨끗한 방과 멋진 장난감 등으로 대변되는 입양아들의 성장 환경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졌으며, 입양아들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선전되곤 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플뢰르 펠르랭, 국가개혁장관 장 뱅상 플라세, 올림픽 메달



리스트 토비 도슨 등이 바로 입양 가정과 이주한 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공한 실제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들처럼 입양 신화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성공한 입양아들도 있지만, 사실상 성공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의 미담은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레 유통되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말”이기도 하다(미디어오늘, 2019/5/10). 해외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정상가정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입양 후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복지적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미국에 이민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듯이, 자녀를 미국 가정에 입양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아메리칸 드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입양은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한국에서 이들을 밀어내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전형적 가족주의나 정상가족이테올로기가 작용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양 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으로의 유입이 해외 입양 결정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물론 입양 신화에 걸맞게 양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온 입양아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입양 신화와는 달리 입양아들의 인권이 유린되기도 했는데, 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양 부모로부터의 폭행을 당하거나 파양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 보내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가거나 불법 체류자로 내몰린 입양아들이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입양인이 서울의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되기도 했으며, 한국에 와서 자신은 고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기형적인 입양제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인 아담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홀트아동복지회가 친부모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기아’로 허위 호적

을 만들어 보냈고 정부는 이를 방기했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프레스리안, 2019/8/20). 허술한 해외 입양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입양인의 몫으로 넘겨진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쿼터제나 입양기관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해외 입양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은 명백하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이들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인해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1년 개봉된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은 스웨덴으로 입양된 (고)신유숙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입양인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소개됨으로써 해외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선교사 도움으로 방송을 통해 사연이 소개되고 친모와 만나면서 기나긴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최근 들어 성장한 입양아들의 귀환이 늘어나면서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통해 공개된 이들의 경험은 잘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나 성공한 입양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태어나서 6개월 만인 1972년 미국 미네소타로 입양된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소설 『피의 언어』를 보면 입양아가 정상 가족의 성원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제인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은 후에 자신의 조카 세 명도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시아계 입양아들은 누가 봐도 백인 부모와는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외모로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인종 차별에 시달리는 등 가족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인 정 트렌카는 2007년부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모임 (TRACK)’을 직접 이끌며 입양인과 미혼모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부모와 인종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입양아라는 사실만으로도 성장과정

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과잉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입양된 이들을 위해 낸시 베리어가 쓴 책 『원초적 상처』에서는 입양한 딸을 사랑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입양부모를 “시험하는 행동(testing-out behavior)”들을 하고 때로는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친생모와의 분리 자체가 입양인에게는 트라우마 경험이므로, 입양자체가 고통이자 원초적 상처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입양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생모는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입양모에게도 유기자의 역할을 투사하곤 했다는 것이다(베리어, 2013). 이와 같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 및 입양의 고충을 들여다보면 입양은 다양한 층위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확신하기 힘들다. 맹목적으로 입양 신화에 대해 확대 재생산하거나 유포하기 보다는 입양아들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 VI. 저출산시대 미혼모 양육권 보장과 입양아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제언

이 논문에서는 6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진행되어 온 해외 입양이 어떤 논리로 지속되어 왔는가에 대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들과 관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한 빈곤과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한 해외 입양의 지속이라고 보기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한국의 정상가족 규범이 교차하고 있었다. 첫째, 부계혈통주의와 ‘대 잇기 입양’으로 인한 정상 가족이데올로기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탈모성화의 길을 걷도록 강요해왔다. 그들에게는 모성이 박탈되었고 아이는 입양 보내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인식되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전쟁고아들을 보호할 비용

을 마련하는 대신 혼혈아들을 미군 아버지의 나라에 보낸다는 명분으로 해외 입양 지원 정책을 펼쳐나갔다. 셋째, 민간기관에서는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내세워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면서도 국내 입양시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넷째, 미국에서는 GI 베이비들을 입양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관용을 자랑하고 선한 부모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를 희망했다.

전쟁고아 입양에서 미혼모 입양으로 한국의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이해관계 일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결정이나 선택권은 무시된 채 강요받았던 타자화된 미혼모의 삶의 궤적은 매우 다른 차원을 보인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상실감이나 외국에 살면서 원가족을 그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갈등해온 입양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은 해외 입양 위주의 국가 지원 정책에서는 찾기 힘들다. 게다가 아동의 해외 입양은 경제대국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에 부적합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초저출산 시대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OECD 회원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고아수출국’ 오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1. 초저출산 시대 한부모가족 정책으로서의 미혼모 정책

서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과거의 사건들로 존재할 뿐, 이제는 미혼모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미혼의 출산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여성으로 판단되어 아이를 분리시키고 입양 보내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성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형적 가족주의가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나 자녀는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될 수 없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견뎌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미혼모의 자녀들은 부

모 없는 고아와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미혼모는 모성을 박탈당하고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었다. 초저출산국가로 전환된 현재까지도 미혼모 관련 정책은 여전히 비혼 여성의 출산을 억압하고 낙태하도록 종용하거나 입양 보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서 2017년의 28.5%에서 2047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족구조의 변화(통계청, 2019:42)와 출산을 저하를 감안하면, 인구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초저출산시대 아동의 해외 입양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강하다.

한국전쟁 직후의 초기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고아나 혼혈아 문제 해결을 위해 비롯되었다면, 21세기까지도 지속되는 해외 입양은 배타적 가족문화의 확장과 함께 정상가족에서 이탈한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주된 이유였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식을 낳고도 아이를 유기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해온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성, 가족, 결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결정하거나,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과의례로서의 결혼과 출산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추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손승영, 2011:122-124).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정상가족에서 이탈한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그 자녀들이 우리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추구하는 바가 친생부모의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데 있다면(이은정, 2014:20), 미혼모가 자녀양육을 포기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요하는 부분 또한 사라져야 할 것이다(강은화, 2006:51-53). 미혼모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한 정책들이 요청된다. 국가 차원에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원가족보호정책이 우선되고 제도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권이 보호받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입양을 중심으로 실

시되어 왔던 미혼모의 자녀 정책에 대해서도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미혼모 관련 정책 또한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 2.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아동의 해외 입양은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OECD 회원국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에 부적절한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유보해왔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013년 서명하면서 2년 안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협약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해외 입양 위주의 정책에서 원가족 양육 위주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일차적으로 원가족이 보호해야 하며, 입양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취지에 걸맞게 미혼모의 양육권과 모성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993년 체결된 헤이그 협약 내용에 맞도록 미혼모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해외 입양 대신 미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구체적 지원책들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비준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의 호적에 아이의 입적이 허용되므로 양육 미혼모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미혼모가 중요한 정책 당사자로 포함되어, 미혼모가 처한 특수한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부모가 부득이 자녀양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입양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해외 입양은 사회적 편견과 눈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가는 친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소홀했던 반면, 오히려 해외 입양을 장려하거나 눈감아준 모순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원가족과의 결별방지’에 두어야 한다. 해외 입양 결정으로 인해 친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고, 시간이 지난 후 자녀를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어져서 평생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동복지를 위한 최우선 원칙은 아동이 원가족과 결별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석광현, 2009:485).

다음으로는 미혼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 미혼모 여성이 싱글 맘 국제컨퍼런스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은 임노동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으므로 “아 이와 살아남으려면 죽을 만큼 가난함을 증명해야 죽지 않을 만큼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한 발언은 미혼모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실감나게 대변한 것이다(미디어오늘, 2019/5/10). 한부모가족으로서의 미혼모 가족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방향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입양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미정 외, 2018).

### 3. 성인 입양인을 위한 서비스

정부는 지난 65년간 20만 명의 영유아를 대거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입양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도 했고, 이들의 입양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또한 성인 입양인들이 귀한 후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입양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성인 입양인들이 쉽게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입양인들의 관심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고 중앙입양원에서는 이전에 비해 귀화한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왔다. 입양정책을 총괄해 오던 ‘중앙입양원’의 업무가 2019년 7월부터 새롭게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 이후, 과연 ‘성인’ 입양인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립된 중앙입양원은 해외로 입양 보냈던 20만 여명의 아동에 대한 입양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출범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앙입양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으로써 기관명에서 ‘입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프레스리안, 2019/6/27). 성인 입양인들의 정체성이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한국 정부가 보여줘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의 부모 찾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고 입양 전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1주일간 숙려기간은 머무를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부여하므로 여성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입양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혼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인터넷 및 개인 거래를 통한 비공식 입양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입양인과 미혼모들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해외 입양을 계속하겠다는 태도 유



지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양인과 미혼모는 「입양특례법」이 입양아가 원가족을 찾고자 할 때를 대비하여 출생신고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입양 후에도 원가족과 만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지지한다. 이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자녀유기 문제 또한 해소되리라 판단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에 비해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혈육이 아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꺼리는 정서로 인해 입양을 하고도 떼땃이 밝히지 못하고 숨겨야 할 정도로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에는 ‘가슴으로 낳았다’,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종종 들릴 정도로 공개입양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신광식, 2002:58-59). 입양사실을 입양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개입양’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지만, 입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은 보기 힘들다. 이에 한국에서도 친생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개방입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양친족 연계’(adoption kinship network)가 가족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영국은 입양 후 접촉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행기관이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양사례 중 약 70%가 입양수속과정에서 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상봉하였다(최진섭, 2012:262-269). 한국에서도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에서의 업무를 개방적 입양 실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입양관련법을 개정하고 입양 성립 후 사후관리 내용을 보다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입양아동에게 평생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고 부모 찾거나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윤은영, 2013:214-215).

#### 4. 미혼모 자조모임과 입양인 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우리사회는 그동안 친모가 자녀를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에는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서자 미혼모의 자녀를 과거처럼 해외로 입양보내서는 안 된다는 반성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출산쇼크를 경험한 후, 2018년에는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로 감소하였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 이제는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해외 입양의 대안으로 미혼모가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혼모들 중 대졸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미혼모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자조 모임을 통해서 미혼모의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귀환한 성인 입양인 문제에도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성인 입양인들은 어려운 환경들에서도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우고 있는 미혼모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미혼모의 자녀와 멘토의 입장에서, 때로는 삼촌 또는 이모가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 복지의 개념을 성인 입양인의 경우까지 넓혀서 입양인 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의 복지 향상과 정보 교환의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입양인들이 친부모 찾기와 권리를 위한 입양인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해외에서도 활동이 시작되었다. 1999년에는 여러 나라의 입양인들이 모여 입양인 대회를 열었으며, 2004년

에는 미국과 노르웨이 등 8개국의 10개 입양 한인 단체들의 연합으로 IKA를 창설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입양 한인들은 입양된 국가도 다양하며, 계층이나 생활양식을 비롯하여 경험의 층위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들은 초국가적 시대 한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여 한국 정부도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 때 해외 입양을 적극 지원했던 국가이지만, 이제는 입양인들이 과거 아픔이나 상실감을 잊고 살 수 있도록 상담 기능도 제공하고 원가족과의 만남을 정부 차원에서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과 거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은화. 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2): 39-59.
- 구드, 윌리엄. 1982. 『가족과 사회』. 최홍기역. 삼성문화문고.
- 권희정. 2014.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5(2): 37-80.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51-98.
- 권희정. 20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 김아람. 2009.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33-71.
- 베리어, 낸시 뉴턴. 2012. 『원초적 상처: 입양가족의 성장을 위한 카운슬링 (The Primal Wound: Understanding the Adopted Child)』. 서울: 뿌리의집 옮김.
- 서정애. 2009. 『십대 여성의 임신과 모성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석광현. 2009.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 15: 421-492.
- 성정현, 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손승영. 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201』 9(2): 245-274.
- 손승영. 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 논의.” 『담론201』 10(1): 207-243.
- 손승영. 2011. 『한국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 손승영. 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연구』 27(1): 35-66.
- 손승영. 2018.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8』. 79-87.
- 신광식. 2002. “대 잇기 입양’ 가고 ‘사랑 입양’ 늘고 있다.” 『뉴스메이커』 2002/2/14.
- 안재진. 2011.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16(4): 71-95.
- 오, 아리사. 2019.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

- 진 역사』. 서울: 뿌리의집.
- 윤은영. 2013. “국내 입양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미국의 입양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2): 191-222.
- 윤택림. 2005.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8(1): 71-94.
- 이미정. 2009.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 입양.” 『젠더리뷰』 13: 71-75.
- 이미정. 2013. “미혼모의 양육권리와 양육여건.” 『미혼모 삶의 쟁점들: 가족주의, 양육여건, 법제도』.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33-45.
- 이미정 · 정지연 · 구미영.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돌. 2008. 『해외 입양과 한국민족주의: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고양: 소나무.
- 이은정. 2014. “국내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 132: 11-22.
- 이해진. 2014. “양육미혼모의 삶의 조건과 모성권.” 『젠더연구』. 19: 59-80.
- 조이스, 캐서린. 2014. 『구원과 탈매』. 서울: 뿌리의 집.
- 최진섭. 2012. “개방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5(2): 261-292.
- 최형묵. 2008. “한국 입양제도의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트렌카, 제인 정(2005). 『피의 언어』. 서울: 와이젤리.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Data Version 4. 2016.
- Joyce, Kathryn. 2013. *The Child Catchers: Rescue, Trafficking, and the New Gospel of Adoption*. Public Affairs.
- Musser, Sandra K. 1992. *I would have Searched Forever*. Jan Pub.
- Riben, Mirah. 1988. *Shedding Light on the Dark Side of Adoption*. Harlo Printing Co.
- Robinson, Evelyn. 2000. *Adoption and Loss: The Hidden Grief*. Clova Publications.
- Shawyer, Joss. 1979. *Death by Adoption*. Cicada.

■ 신문 기사

미디어오늘. 2019. 5. 10. “해외 입양미담?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말’.”

프레시안. 2019. 5. 8. “‘잔여의 귀환’ 10년, 한국가부장제를 흔들다: 미혼모 · 입양인  
당사자 운동의 의미와 성과.”

프레시안. 2019. 6. 27.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프레시안. 2019. 8. 20. “잘 선별된 수출품 ‘아기’들, 가장 충격적인 사진.”

## Children of Unwed Mothers Driven Abroad: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the Disregard of State Responsibility

Sohn Seong Young\*

### **Abstract** .....

Adoption of modern meaning started by sending orphans abroad after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now. Although most of them were orphans and half-breed children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make up the majority since 1970s. Unwed mothers had to give up motherhood under the sociocultural norms which justify only pregnancy and childbirth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leg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ideology that overseas adoption can provide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work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normal family ideology worked as the 'push factor' to send children of unwed mother abroad, longing for western society and hope of flowing children into normal home worked as the 'pull factor.' Also the business sending Korean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has continued by close relationship of state and private institutions. Adop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profited by devoting overseas adoption with high fees and state played important role backing business of overseas adoption by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Keywords:** Unwed Mother, Overseas Adoption, Exclusive Family Culture, Adult Adoptee, Responsibilities of State  
.....

접수일: 2020.01.10.

수정일: 2020.02.25.

확정일: 2020.02.26.

---

\* Dongduk Women's University / Gender Studies